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기획연구보고서 | 22-08호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박헌석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연구진

내부 연구진

박현석 연구위원(연구책임)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국회는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000년대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 방안들이 그동안 제시되어 왔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 문제도 결국은 정당체계를 개편하여 국회의 정책기획 기능을 높이고 여야간 타협의 공간을 넓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개혁 논의들은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서 변화의 계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행위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의원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당별 정책 선호를 분석하여 여당과 야당이 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의제들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미래정책 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여당과 야당소속 의원들은 서로 다른 정책 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과학기술과 사회변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장기 정책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미래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국회의원 조사 연구의 필요성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제2장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설문조사 결과분석	7
제1절 개요	9
제2절 미래인식	12
제3절 중장기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14
제4절 영역별 정책 선호	22
제3장 결론	49
부록	55
참고문헌	71
Abstract	75

표 목 차

〈표 1〉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특성	10
〈표 2-1〉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순위, 국회의원)	15
〈표 2-2〉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순위, 보좌진)	16
〈표 3-1〉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3순위, 국회의원)	18
〈표 3-2〉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3순위, 보좌진)	19
〈표 4-1〉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23
〈표 4-2〉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24
〈표 5-1〉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26
〈표 5-2〉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27
〈표 6-1〉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29
〈표 6-2〉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30
〈표 6-3〉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31
〈표 7-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33
〈표 7-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34
〈표 8-1〉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36
〈표 8-2〉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37
〈표 8-3〉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38
〈표 8-4〉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39
〈표 9-1〉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42
〈표 9-2〉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42
〈표 10-1〉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44
〈표 10-2〉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45
〈표 11-1〉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47
〈표 11-2〉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48
〈표 A-1〉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57
〈표 A-2〉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58
〈표 A-3〉 근로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59

〈표 A-4〉 근로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60
〈표 A-5〉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응방안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61
〈표 A-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62
〈표 A-7〉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63
〈표 A-8〉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64
〈표 A-9〉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65
〈표 A-10〉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66
〈표 A-11〉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67
〈표 A-12〉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68
〈표 A-13〉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69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중장기 미래의제와 국회의 역할

-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행정부 주도로 중장기 정책을 입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의 필요

□ 국회의원 및 보좌진 미래의제 인식조사

-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정책 우선순위와 정책대안에 대한 선호 조사 실시
-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정책선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의제 선별

2 설문조사 결과

□ 21대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 원내 양대 정당 의원들은 “양극화 해소”를 시급한 과제 1순위로 제시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양대 정당 의원들이 주요 과제로 지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시급한 의제로 선택

□ 불평등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한 정책선호

● 소득 양극화 완화하는 복지정책

-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국민의힘은 선별복지를 선호
- 2050년 시점을 고려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보편복지 지지가 다소 증가

● 노동 양극화 완화 대책

- 단기 미래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각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지지가 확대됨
- 자동화로 인한 노동대체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속도 및 범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수렴

● 자산 양극화 완화 대책

-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조세 및 투기용 부동산 규제 강화를,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주장

□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한 정책선호

● 외국인 이민확대 정책

-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외국인의 국내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반반으로 나뉘어 있음.

□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선호

● 신재생 에너지 전환정책

- 단기 대책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과감하게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소 많았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점진적 전환을 선호하는 의원이 대다수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양당 모두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선호하는 응답자 증가

□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선호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 양당 모두 관리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 지지자가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차지

● 바이오 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 민주당은 바이오기술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됨
- 국민의힘은 단기대책으로는 정책적 지원론자가 다수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로 나타남

3 결론

□ 양극화 대책: 당파적 선호의 대립이 심각하나 협의의 공간 존재

- 복지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양당의 선호가 수렴하기 어려움
- 장기적 관점 고려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간 협의 필요
- 인공지능·자동화로 인한 노동대체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 인구감소와 이민정책: 양당간 협의 활성화 필요

- 민주당은 이민확대 정책 지지자가 다수이나 국민의힘은 다수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민확대 지지론자들 간의 협의 활성화 필요

□ 신재생 에너지 전환: 단기 대책 차원에서는 당파적 선호가 대립

- 복지 및 부동산 정책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지지

-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중심으로 협의 활성화 필요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양당의 공감대 존재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의 경우 양당 모두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지지자가 다수
 - 바이오 기술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규제론과 지원론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향후 깊이있는 논의 활성화 필요

제1장

국회의원 조사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 1 절 연구의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편, 연금 등 공적 사회보험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대책,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여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성과가 미진하다. 집권당이 바뀌거나, 집권당이 바뀌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들의 숙명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중장기 미래정책을 제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서 집권당이 교체되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행정부나 사법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조진만·임성학 2008, 유성진 2009, 서현진 2016). 국정 운영에서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회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여당과 야당이 정쟁을 지속하면서 민생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상시 논쟁을 지속하는 곳이다. 싸울 때는 싸우되 서로 다른 의견의 장점을 종합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요한 정책 의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 선진국들의 의회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체계를 개편하려고 노력하는 등 제도개혁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으나 여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들이 오늘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 개혁은 그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의 생산적인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자 차원의 계기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여당과 야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까?

국회미래연구원은 여당과 야당의 생산적인 논쟁과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탐색적 차원에서 2021년에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정책의제와 국회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고(박현석 2021), 2022년에는 2021년의 연구를 확대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중장기 정책 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를 분석하여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의원들의 정책 선호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로는 총선이 끝나면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에 대한 조사를 들 수 있다(강원택 2012, 박윤희 외 2016, 강우창 외 2020). 이 연구들은 4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대표적인 갈등적 정책영역의 정책 태도에 대해 측정하고 분석한다. 국회의원 개인 수준의 이념성향과 정책선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우리는 기존의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범위한 정책 영역으로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성향 조사연구와 비교할 때 우리의 연구는 국회에서 다루지거나 논쟁해야 할 중장기 정책 의제들을 폭넓게 선정하고 이들 의제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변화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사연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1년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인 사전연구로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실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의원실 별로 국회의원과 무작위로 선택된 보좌진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2021년 조사 결과와 2022년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음 절에서 2022년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2021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도 일부 제시할 계획이다. 2021년의 조사와 2022년의 조사 사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집권당이 바뀌었으므로 정권교체 전후로 국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2장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미래인식

제3절 중장기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제4절 영역별 정책 선호

제 1 절 개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의원실 별로 전체 보좌진 중 무작위로 1명이 응답하도록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300명의 국회의원 중 152명이, 그리고 244개 의원실의 보좌진이 의원실 별로 1인씩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국회의원의 경우 남자 121명(79.6%), 여자 31명(20.4%),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가 합해서 11명(7.2%), 50대 이상이 131명(92.8%)이었다. 선출 구분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20명(78.9%), 비례대표 의원이 32명(21.1%) 응답하였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명(56.6%), 국민의힘 56명(36.8%), 정의당 5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도합 6.6%)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89명(58.6%), 재선 34명(22.4%), 3선 15명(9.9%), 4선 이상이 14명(9.1%)이었다. 21대 국회의원의 실제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0.9%, 여성이 19.1%,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88.7%, 40대 이하가 11.3%,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6.3%, 국민의힘 38.3%, 정의당과 그 외 정당, 무소속을 합하면 5.4%이고,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52%, 재선이 23%, 3선 이상이 25%이다(이상 국회 홈페이지, 2022). 응답자와 국회의원 전체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성비, 정당분포, 연령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초선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실제보다 약간 과대표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체로 실제 구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좌진의 경우는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71.2%, 여성이 28.2%, 연령대로는 20대 19.7%, 30대 34.5%, 40대 28.4%, 50대 이상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박현석 2021),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남성 55.3%, 여성 44.7%, 20대 34%, 30대 40.2%, 40대 20.5%, 50대 이상 5.3%로 여성과 2-30대가 다소 과대표된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표 1〉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특성

(1) 국회의원			(2) 보좌진		
분류		명	분류		명
성별	남자	121	성별	남자	135
	여자	31		여자	109
연령별	30대 이하	6	연령별	20대	83
	40대	15		30대	98
	50대 이상	131		40대	50
				50대 이상	1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86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36
	국민의힘	56		국민의힘	94
	정의당	5		정의당	7
	기본소득당	1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시대전환	1
	무소속	3		무소속	5
선출 구분별	지역구	120	직급별	보좌관	28
	비례대표	32		선임비서관	41
당선 횟수별	초선	89		비서관	130
	재선	34		인턴	42
	3선	15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26
	4선 이상	14		6개월~1년	29
		1년~4년		99	
		4년 이상		88	
계		152	계		244

2022년 조사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경제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미래의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해 보면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당 모두 양극화 해소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로 보았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양당이 공동으로 지목한 시급한 미래의제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시급한 의제라고 지목하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꼽았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일반적인 미래인식에 대해 살펴본 뒤, 정책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

진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양당이 공동으로 제시한 중요 미래의제들, 그리고 각 당에서 많은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은 미래의제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정책선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미래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구체적인 미래정책 의제들에 대해 질문하기에 앞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미래’하면 일반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40.5%의 응답자들이 11~20년 후라고 답했고, 이어서 6~10년 후(22.2%), 5년 이내(20.9%), 21~30년 후(13.7%), 31년 이상 후(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고려하는 미래는 몇 년 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51% 응답자들이 5년 이내를 선택하였고, 6~10년 후가 29.4%, 11~20년 후가 14.4%, 21~30년 후가 3.9%, 31년 이후가 1.3%로 나타났다. 보좌진들의 경우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다.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질문에 47.3%가 11~20년 후를 선택했고, 뒤이어 6~10년 후(26.7%), 향후 5년 이내(13.6%), 21~30년 후(9.1%)가 뒤를 이었다. 의정활동에서 고려하고 있는 미래를 묻는 질문에 55.1%가 5년 이내를 선택했고, 27.2%가 6~10년 후라고 응답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일반적인 미래라고 하면 대략 10년에서 20년 후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4년 주기로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다수가 5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많은 정책들의 장기적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보다 임박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법안에 따라서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안들은 5년 이내 혹은 6~10년 정도의 미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1점(매우 나빠질 것)에서 10점(매우 좋아질 것) 중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응답의 평균치는 6.8점이었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각각 평균 6.0점과 5.6점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미래 전망은 정당, 선수, 성별 등과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자신의 미래보다 다소 약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 점수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보좌

진들의 경우는 자신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의 경우 평균 각각 6.7점, 5.6점이었고, 정당, 직급, 성별 등과 무관하게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보좌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5.1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미래나 세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치에서는 정당별 차이가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대한민국 미래전망 평균값은 5.6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8로 나타났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일까 혹은 만들어지는 것일까?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과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 중 무엇에 의해 더 결정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점(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에서 5점(외부 환경변화의 영향이 더 중요)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33.2%의 국회의원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선택(① + ②)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36.1%가 중간(③), 30.1%가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④ + ⑤)을 택했다. 보좌진의 경우는 각각 35.2%, 28.7%, 36.1%로 나타났다.

제3절

중장기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중 갈등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연금 및 노동정책의 대전환, 교육 개혁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생각하는 시급한 미래이슈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국회의원(32%)과 보좌진(25.8%)은 1순위로 “경제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다음중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루야 할 미래 이슈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② 새로운 노사관계 ③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④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⑤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⑥ 공적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⑦ 한반도 평화(북핵, 통일) ⑧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⑨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⑩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사회 ⑪ 미중 경쟁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안보 ⑫ 기타 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응답자들은 양극화 해소에 이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15%)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12.4%)를 선택했다.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11.8%)과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11.8%)도 10%가 넘는 응답자들이 1순위로 다루야 할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보좌진의 경우는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21.3%),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11.5%),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10.2%)를 양극화에 이어 중요한 문제 1순위로 선택하였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으나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양극화 해소(32%)와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인구절벽 문제(15%)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보좌진은 두 가지 응답의 비율 사이의 차이가 4.5% 포인트로 크게 나지 않았다. 젊은 세대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부담을 더 무겁게 짊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50대 이상이 다수를 이루는 국회의원 응답자들과 2-30대가 다수를 이루는 보좌진 응답자들의 연령대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11.8%의 국회의원들이 정치 거버넌스 개혁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꼽았으나, 보좌진의 경우 5.3%만이 정치 거버넌스 개혁이 1순위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2-1〉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순위, 국회의원)

		합계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새로운 노사관계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공직 연금,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교육 개혁과 평생학습 사회	미중 경쟁 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 안보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153	12.4	3.3	32.0	11.8	11.8	3.3	2.0	15.0	4.6	.7	2.0	1.3
성별	남자	100.0	121	12.4	1.7	37.2	10.7	5.8	4.1	1.7	15.7	5.8	.8	2.5	1.7
	여자	100.0	32	12.5	9.4	12.5	15.6	34.4	.0	3.1	12.5	.0	.0	.0	.0
연령별	30대	100.0	6	.0	16.7	33.3	.0	33.3	.0	.0	16.7	.0	.0	.0	.0
	40대	100.0	16	6.3	6.3	31.3	25.0	6.3	6.3	.0	12.5	6.3	.0	.0	.0
	50대 이상	100.0	131	13.7	2.3	32.1	10.7	11.5	3.1	2.3	15.3	4.6	.8	2.3	1.5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10.0	2.5	35.0	10.8	9.2	4.2	1.7	16.7	5.8	.8	1.7	1.7
	비례대표	100.0	33	21.2	6.1	21.2	15.2	21.2	.0	3.0	9.1	.0	.0	3.0	.0
정당별	더불어 민주당	100.0	87	4.6	2.3	36.8	13.8	14.9	2.3	2.3	16.1	4.6	1.1	1.1	.0
	국민의힘	100.0	56	26.8	3.6	25.0	8.9	1.8	5.4	1.8	14.3	5.4	.0	3.6	3.6
	정의당	100.0	5	.0	20.0	.0	.0	80.0	.0	.0	.0	.0	.0	.0	.0
	기본소득당	100.0	1	.0	.0	100.0	.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33.3	33.3	.0	.0	.0	33.3	.0	.0	.0	.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15.6	4.4	26.7	14.4	11.1	3.3	2.2	12.2	4.4	1.1	2.2	2.2
	재선	100.0	34	5.9	2.9	35.3	8.8	17.6	.0	.0	20.6	5.9	.0	2.9	.0
	3선	100.0	15	6.7	.0	53.3	.0	6.7	13.3	.0	13.3	6.7	.0	.0	.0
	4선 이상	100.0	14	14.3	.0	35.7	14.3	7.1	.0	7.1	21.4	.0	.0	.0	.0

〈표 2-2〉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미래 이슈(1순위, 보좌진)

	합계		과학 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 완화	새로운 노사 관계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기후 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공적 연금,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미중 경쟁 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 안보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전체	100.0	244	10.2	3.7	25.8	5.3	11.5	3.3	4.5	21.3	4.1	8.6	1.6
성별	남자	135	11.1	3.0	20.0	5.2	10.4	2.2	6.7	24.4	4.4	10.4	2.2
	여자	109	9.2	4.6	33.0	5.5	12.8	4.6	1.8	17.4	3.7	6.4	.9
연령별	20대	83	10.8	2.4	24.1	7.2	8.4	1.2	4.8	26.5	2.4	8.4	3.6
	30대	98	9.2	4.1	27.6	3.1	10.2	5.1	3.1	21.4	6.1	10.2	.0
	40대	50	14.0	4.0	24.0	8.0	16.0	4.0	4.0	12.0	4.0	8.0	2.0
	50대 이상	13	.0	7.7	30.8	.0	23.1	.0	15.4	23.1	.0	.0	.0
직책별	보좌관	28	3.6	7.1	25.0	3.6	14.3	3.6	10.7	21.4	3.6	7.1	.0
	선임비서관	41	14.6	4.9	24.4	7.3	9.8	7.3	.0	17.1	2.4	9.8	2.4
	비서관	130	11.5	3.8	26.2	4.6	13.1	3.1	4.6	17.7	6.2	8.5	.8
	인턴	42	7.1	.0	26.2	7.1	7.1	.0	4.8	35.7	.0	7.1	4.8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36	5.1	2.9	33.1	6.6	14.0	1.5	2.9	19.1	4.4	8.8	1.5
	국민의힘	94	18.1	4.3	13.8	4.3	6.4	5.3	6.4	25.5	4.3	9.6	2.1
	정의당	7	.0	14.3	14.3	.0	42.9	14.3	.0	14.3	.0	.0	.0
	기본소득당	1	.0	.0	100.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	.0	.0	100.0	.0	.0	.0	.0	.0	.0	.0	.0
	무소속	5	20.0	.0	40.0	.0	.0	.0	20.0	20.0	.0	.0	.0
근무 경력별	6개월 미만	26	23.1	.0	23.1	7.7	7.7	.0	3.8	23.1	.0	7.7	3.8
	6개월~1년	29	3.4	.0	24.1	6.9	10.3	.0	13.8	31.0	.0	6.9	3.4
	1년~4년	99	6.1	4.0	25.3	5.1	13.1	5.1	3.0	21.2	7.1	8.1	2.0
	4년 이상	88	13.6	5.7	27.3	4.5	11.4	3.4	3.4	17.0	3.4	10.2	.0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정당 별로도 온도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36.8%가 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꼽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해결, 정치거버넌스 개혁 등이 15% 내외의 선택을 받았다. 1위인 양극화 해소와 2위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이의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26.8%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1순위 과제로 선택하였고, 양극화해소는 25%로 2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1순위 과제로 선택한 민주당 의원은 4.6%에 불과했다. 보좌진의 응답에서도 소속 정당에 따라 응답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의 경우

33.1%가 양극화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선택했고, 19.1%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골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 중 22.5%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뒤이어 18.1%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선택했으며, 양극화 해소는 13.8%로 3위에 머물렀다.

정의당의 경우 총 6명의 의원 중 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중 4명이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고 1명이 양극화 해소를 선택하였다. 설문에 응한 7명의 보좌진 중에서도 3명이 기후변화 문제가 1순위라고 응답했고, 양극화, 노사관계, 사회보험 개혁, 저출산 고령화를 각 1명씩 선택하였다.

2021년에 실시한 보좌진 대상 미래인식 조사결과¹⁾와 2022년의 보좌진 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선택의 분포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꼽은 보좌진 응답자가 2021년에는 37.2%(368명 중 137명)였지만 2022년에는 25.8%로 줄어들었다.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경우 총 211명 중 90명(42.7%)이 양극화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선택했고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21명),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20명),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19명)가 양극화 해소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양극화 해소(23명),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21명),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19명)의 순으로 세 가지 이슈가 비슷한 수준의 선택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소속 보좌진 모두 2021년과 비교할 때 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사이에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보수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환경이 바뀌자 보좌진들의 미래의제 인식 또한 변화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만 고려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64.7%의 국회의원 응답자가 양극화 해소를 3순위 이내에 드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인구절벽(39.2%),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1) 21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미래이슈 목록에서 “미중경쟁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안보” 항목은 2022년 조사에서 추가되었고 2021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38.6%), 정치 거버넌스 개혁(30.7%)이 뒤이어 30% 이상의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다.²⁾ 보좌진의 경우 양극화 해소가 54.5%,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51.6%,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가 41.8%, 그리고 미중 경쟁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안보가 30.7%의 선택을 받았다. 1순위만 집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의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 보좌진의 경우는 1순위만 집계했을 때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변화와 미중 경쟁시대 글로벌 경제안보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1~3순위, 국회의원)

	합계	과학 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		새로운 노사 관계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기후 변화 대처/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공적 연금,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교육 개혁과 평생 학습 사회		미중 경쟁 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 안보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	%	%	%	%	%	%	%	%			
전체		100.0	153	20.9	15.0	64.7	30.7	38.6	18.3	20.9	39.2	24.8	7.8	17.0	2.0												
성별	남자	100.0	121	18.2	13.2	67.8	30.6	32.2	15.7	22.3	42.1	28.1	8.3	19.0	2.5												
	여자	100.0	32	31.3	21.9	53.1	31.3	62.5	28.1	15.6	28.1	12.5	6.3	9.4	0												
연령별	30대	100.0	6	50.0	16.7	66.7	16.7	66.7	16.7	.0	33.3	.0	16.7	16.7	0												
	40대	100.0	16	25.0	18.8	75.0	56.3	37.5	25.0	31.3	12.5	12.5	6.3	0	0												
	50대 이상	100.0	131	19.1	14.5	63.4	28.2	37.4	17.6	20.6	42.7	27.5	7.6	19.1	2.3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16.7	13.3	66.7	29.2	36.7	17.5	20.0	41.7	28.3	8.3	19.2	2.5												
	비례대표	100.0	33	36.4	21.2	57.6	36.4	45.5	21.2	24.2	30.3	12.1	6.1	9.1	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9.2	9.2	72.4	34.5	47.1	14.9	20.7	41.4	26.4	8.0	14.9	1.1												
	국민의힘	100.0	56	39.3	23.2	55.4	26.8	19.6	23.2	23.2	39.3	19.6	7.1	19.6	3.6												
	정의당	100.0	5	20.0	40.0	40.0	0	100.0	20.0	20.0	20.0	20.0	.0	2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100.0	0	100.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33.3	33.3	33.3	0	0	33.3	100.0	33.3	33.3	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25.6	17.8	64.4	33.3	38.9	18.9	17.8	35.6	23.3	6.7	14.4	3.3												
	재선	100.0	34	11.8	14.7	61.8	32.4	50.0	5.9	26.5	44.1	26.5	8.8	17.6	0												
	3선	100.0	15	13.3	0	73.3	13.3	13.3	46.7	20.0	53.3	33.3	20.0	13.3	0												
	4선 이상	100.0	14	21.4	14.3	64.3	28.6	35.7	14.3	28.6	35.7	21.4	0	35.7	0												

2)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 응답을 모두 더하여 이슈별로 빈도를 계산한 결과이므로, 이슈별로 선택된 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100%를 넘게 된다.

〈표 3-2〉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미래 이슈(1~3순위, 보좌진)

	합계	과학 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		새로운 노사 관계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기후 변화 대처/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공적 연금,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인구 질적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교육 개혁과 평생 학습 사회		미중 경쟁 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 안보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	%	%	%	%	%	%	%	%	
전체		100.0	244	21.3	13.1	54.5	17.2	41.8	23.4	17.6	51.6	20.5	6.1	30.7	2.0										
성별	남자	100.0	135	23.7	11.9	45.9	18.5	34.8	23.0	24.4	53.3	21.5	4.4	35.6	3.0										
	여자	100.0	109	18.3	14.7	65.1	15.6	50.5	23.9	9.2	49.5	19.3	8.3	24.8	0.9										
연령별	20대	100.0	83	22.9	12.0	48.2	24.1	34.9	22.9	18.1	57.8	24.1	2.4	28.9	3.6										
	30대	100.0	98	22.4	14.3	59.2	11.2	44.9	22.4	9.2	52.0	19.4	7.1	36.7	1.0										
	40대	100.0	50	22.0	12.0	58.0	20.0	42.0	30.0	22.0	40.0	18.0	10.0	24.0	2.0										
	50대 이상	100.0	13	0	15.4	46.2	7.7	61.5	7.7	61.5	53.8	15.4	7.7	23.1	0										
직책별	보좌관	100.0	28	7.1	14.3	57.1	14.3	39.3	28.6	35.7	42.9	28.6	7.1	25.0	.0										
	선임비서관	100.0	41	29.3	17.1	51.2	9.8	43.9	29.3	17.1	53.7	14.6	7.3	24.4	2.4										
	비서관	100.0	130	23.1	13.8	55.4	18.5	45.4	20.0	14.6	49.2	19.2	6.2	33.1	1.5										
	인턴	100.0	42	19.0	7.1	50.0	23.8	26.2	26.2	16.7	61.9	26.2	4.8	33.3	4.8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8	12.5	0	87.5	37.5	12.5	25.0	25.0	50.0	12.5	0	37.5	0										
	전문학사	100.0	6	16.7	0	50.0	.0	50.0	16.7	50.0	50.0	33.3	16.7	16.7	0										
	학사	100.0	169	21.9	13.6	55.6	15.4	41.4	26.0	14.8	50.3	20.7	5.3	32.5	2.4										
	석사	100.0	54	22.2	16.7	46.3	22.2	48.1	14.8	18.5	57.4	20.4	7.4	25.9	0										
	박사	100.0	6	16.7	0	66.7	16.7	33.3	16.7	50.0	50.0	16.7	16.7	16.7	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6	10.3	12.5	62.5	19.1	50.7	15.4	16.9	53.7	21.3	5.9	29.4	2.2										
	국민의힘	100.0	94	37.2	11.7	42.6	12.8	29.8	35.1	18.1	52.1	19.1	6.4	33.0	2.1										
	정의당	100.0	7	0	57.1	42.9	14.3	57.1	28.6	14.3	28.6	28.6	14.3	14.3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100.0	0	0	0	0	0	0	100.0	0										
	무소속	100.0	5	40.0	0	60.0	40.0	0	20.0	40.0	40.0	20.0	0	40.0	0										
여야별	여당	100.0	94	37.2	11.7	42.6	12.8	29.8	35.1	18.1	52.1	19.1	6.4	33.0	2.1										
	야당/무소속	100.0	150	11.3	14.0	62.0	20.0	49.3	16.0	17.3	51.3	21.3	6.0	29.3	2.0										
근무 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38.5	11.5	42.3	15.4	30.8	26.9	23.1	50.0	15.4	3.8	38.5	3.8										
	6개월~1년	100.0	29	13.8	10.3	55.2	27.6	31.0	13.8	20.7	58.6	20.7	3.4	41.4	3.4										
	1년~4년	100.0	99	19.2	14.1	58.6	18.2	47.5	23.2	14.1	49.5	21.2	4.0	27.3	3.0										
	4년 이상	100.0	88	21.6	13.6	52.3	13.6	40.9	26.1	19.3	51.1	21.6	10.2	29.5	.0										

3순위까지의 합산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양극화 해소가 양대 정당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 72.4%, 국민의힘은 55.4%의 의원 응답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기타를 제외한 전체 11개 미래의제 중에서 3순위 안에 드는 중요한 문제로 지목하였다. 민주당의 경우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47.1%), 고령화 저출산(41.4%), 정치 거버넌스 개혁(34.5%)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양극화 해소의 뒤를 이어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동률로 39.3%의 선택을 받았고, 26.8%의 응답자들이 정치 거버넌스 개혁을 3순위 안에 드는 시급한 미래의제라고 응답했다.

보좌진의 응답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양극화 해소(62.5%), 고령화 저출산 문제(53.7%),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50.7%)을 3순위 이내에 드는 시급한 미래의제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52.1%), 양극화 해소(42.6%),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37.2%),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35.1%), 미중 경쟁시대 경제안보(33.0%) 등을 주요 이슈로 선택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를 비교해 보면 21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미래의제의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렴되는 면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양극화 해소를 선택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3순위까지의 답변을 합산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도 양극화 해소를 선택한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3순위까지 합산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꼽은 3대 의제는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이고, 국민의힘은 양극화 해소,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각 정당의 3가지 주요 의제 중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점 의제이며,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와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문제는 당파적 입장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 의제로 내걸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편 문제에 대한 양당의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표 3-1>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동률로 23.2%의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반면, 민주당은 각각 14.9%와 9.2%에 머물렀다.

4명이 보편복지를 선택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표 4-2〉). 2050년을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을 설계할 경우 전체 의원의 61.2%가 보편복지로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응답자의 75.6%,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38.2%, 정의당 의원 응답자의 60%가 보편복지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양대 정당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응답한 보좌진들의 경우 10년 이내와 2050년 모두 의원들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보좌관들의 응답을 정리한 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4-1〉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선별복지	② 보편복지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50.3	49.7
성별	남자	100.0	121	52.1	47.9
	여자	100.0	32	43.8	56.3
연령별	30대	100.0	6	.0	100.0
	40대	100.0	16	56.3	43.8
	50대 이상	100.0	131	51.9	48.1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49.2	50.8
	비례대표	100.0	33	54.5	45.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29.9	70.1
	국민의힘	100.0	56	87.5	12.5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33.3	66.7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51.1	48.9
	재선	100.0	34	50.0	50.0
	3선	100.0	15	40.0	60.0
	4선 이상	100.0	14	57.1	42.9

10년 이내 시기에 필요한 정책으로 65.1%의 국회의원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9%는 고용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 역시 정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들은 84.9%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택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들은 32.1%만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택하였고 나머지 67.9%는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의당 소속 의원 응답자는 총 5명중 4명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하였다. 2050년을 고려하는 경우 58.9%의 응답자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41.1%가 고용 관련 규제완화를 골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응답자의 69.1%,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41.8%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했다. <표 5-1>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의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한 의원이 다소 줄었고, 국민의힘은 다소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당 내부적으로 보면 10년 내의 경우 특정 정책대안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이라면, 2050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고 특정 대안에 대한 지배적인 선호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경우 10년 내에 필요한 정책을 보자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85%에 육박하는 대다수가 지지하는 지배적인 대안이지만, 2050년이라는 장기적 미래를 감안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이 69.1%로 줄어들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30.9%로 늘어났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절대 다수가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여 당내 의견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정당 소속 의원들의 선호가 동질적인 경우 정당간 타협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해당 정책을 법률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정당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정당간 타협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중도파가 타협을 하거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파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보좌진들의 응답은 10년 이내와 2050년 모두 의원들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록 표A-3, 4 참조).

〈표 5-1〉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②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
		%	사례수	%	%
전체		100.0	152	65.1	34.9
성별	남자	100.0	120	65.8	34.2
	여자	100.0	32	62.5	37.5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40대	100.0	16	62.5	37.5
	50대 이상	100.0	130	64.6	35.4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9	68.1	31.9
	비례대표	100.0	33	54.5	45.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6	84.9	15.1
	국민의힘	100.0	56	32.1	67.9
	정의당	100.0	5	80.0	2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3	66.7	33.3
여야별	여당	100.0	56	32.1	67.9
	야당/무소속	100.0	96	84.4	15.6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61.8	38.2
	재선	100.0	34	76.5	23.5
	3선	100.0	15	66.7	33.3
	4선 이상	100.0	14	57.1	42.9

〈표 5-2〉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②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
		%	사례수	%	%
전체		100.0	146	58.9	41.1
성별	남자	100.0	114	55.3	44.7
	여자	100.0	32	71.9	28.1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40대	100.0	14	71.4	28.6
	50대 이상	100.0	126	56.3	43.7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3	59.3	40.7
	비례대표	100.0	33	57.6	42.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1	69.1	30.9
	국민의힘	100.0	55	41.8	58.2
	정의당	100.0	5	60.0	4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100.0	.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8	48.9	51.1
	재선	100.0	32	81.3	18.8
	3선	100.0	12	83.3	16.7
	4선 이상	100.0	14	50.0	50.0

기술발전에 따른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는 어떤 노동정책을 채택해야 할까?

〈표 6-1〉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노동대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	② 속도와 범위 조절 및 통제 필요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39.9	60.1
성별	남자	100.0	121	40.5	59.5
	여자	100.0	32	37.5	62.5
연령별	30대	100.0	6	50.0	50.0
	40대	100.0	16	43.8	56.3
	50대 이상	100.0	131	38.9	61.1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42.5	57.5
	비례대표	100.0	33	30.3	69.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37.9	62.1
	국민의힘	100.0	56	46.4	53.6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0	100.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43.3	56.7
	재선	100.0	34	35.3	64.7
	3선	100.0	15	33.3	66.7
	4선 이상	100.0	14	35.7	64.3

〈표 6-2〉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노동대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	② 속도와 범위 조절 및 통제 필요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44.9	55.1
성별	남자	100.0	115	43.5	56.5
	여자	100.0	32	50.0	50.0
연령별	30대	100.0	6	50.0	50.0
	40대	100.0	14	42.9	57.1
	50대 이상	100.0	127	44.9	55.1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4	41.2	58.8
	비례대표	100.0	33	57.6	42.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37.8	62.2
	국민의힘	100.0	55	58.2	41.8
	정의당	100.0	5	.0	10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3	33.3	66.7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50.6	49.4
	재선	100.0	32	28.1	71.9
	3선	100.0	12	50.0	50.0
	4선 이상	100.0	14	42.9	57.1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대한 대응책의 경우 보좌진들의 응답은 의원들과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10년 이내의 시점에서는 의원들과 보좌진의 응답 구성이 유사하다(부록의 〈표 A-5〉 참조). 2050년을 고려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54.7%의 보좌진 응답자가 속도 및 범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국회의원 응답자들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2050년의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응답의 방향이 여전히 차이가 큰 반면, 보좌진의 경우는 양당의 견해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가 46.2%로 여전히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율이고,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한 국민의힘 보좌진과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비율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이 43.3%에 그쳤으며 56.7%가 속도와 범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6-3〉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① 노동대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	② 속도와 범위 조절 및 통제 필요
		%	사례수	%	%
전체		100.0	234	45.3	54.7
성별	남자	100.0	130	49.2	50.8
	여자	100.0	104	40.4	59.6
연령별	20대	100.0	80	41.3	58.8
	30대	100.0	94	55.3	44.7
	40대	100.0	47	29.8	70.2
	50대 이상	100.0	13	53.8	46.2
직책별	보좌관	100.0	27	40.7	59.3
	선임비서관	100.0	39	48.7	51.3
	비서관	100.0	126	43.7	56.3
	인턴	100.0	40	50.0	50.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0	46.2	53.8
	국민의힘	100.0	90	43.3	56.7
	정의당	100.0	7	42.9	57.1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4	45.8	54.2
	6개월~1년	100.0	29	51.7	48.3
	1년~4년	100.0	96	47.9	52.1
	4년 이상	100.0	84	39.3	60.7

〈표 7-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부동산 세제 강화 및 투기용 부동산 규제	②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장려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64.7	35.3
성별	남자	100.0	121	65.3	34.7
	여자	100.0	32	62.5	37.5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40대	100.0	16	50.0	50.0
	50대 이상	100.0	131	65.6	34.4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65.0	35.0
	비례대표	100.0	33	63.6	36.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78.2	21.8
	국민의힘	100.0	56	39.3	60.7
	정의당	100.0	5	10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100.0	.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64.4	35.6
	재선	100.0	34	70.6	29.4
	3선	100.0	15	66.7	33.3
	4선 이상	100.0	14	50.0	50.0

〈표 7-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부동산 세제 강화 및 투기용 부동산 규제	②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장려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54.4	45.6
성별	남자	100.0	115	50.4	49.6
	여자	100.0	32	68.8	31.3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40대	100.0	14	64.3	35.7
	50대 이상	100.0	127	52.0	48.0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4	51.8	48.2
	비례대표	100.0	33	63.6	36.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63.4	36.6
	국민의힘	100.0	55	38.2	61.8
	정의당	100.0	5	80.0	2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66.7	33.3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50.6	49.4
	재선	100.0	32	68.8	31.3
	3선	100.0	12	50.0	50.0
	4선 이상	100.0	14	50.0	50.0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를 종합해 보면 소속 정당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의원들 사이의 선호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복지정책의 경우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진보 계열 정당과 보수 계열 정당의 정책 선호가 뚜렷하게 차이가 났고, 단기적으로는 두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유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의 경우 정당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복지정책 선호의 정당별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근로조건 격차 해소 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당파적인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장기적 시야에서는 당파적인 대립의 수준이 낮아져서 양대 정당 내부에서 소수의견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당 내부의 정책선호의 통일성이 낮아

공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포는 이와 같은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1〉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36.6	63.4
성별	남자	100.0	121	38.0	62.0
	여자	100.0	32	31.3	68.8
연령별	30대	100.0	6	16.7	83.3
	40대	100.0	16	37.5	62.5
	50대 이상	100.0	131	37.4	62.6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38.3	61.7
	비례대표	100.0	33	30.3	69.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29.9	70.1
	국민의힘	100.0	56	50.0	50.0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33.3	66.7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32.2	67.8
	재선	100.0	34	32.4	67.6
	3선	100.0	15	60.0	40.0
	4선 이상	100.0	14	50.0	50.0

〈표 8-2〉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32.7	67.3
성별	남자	100.0	115	35.7	64.3
	여자	100.0	32	21.9	78.1
연령별	30대	100.0	6	16.7	83.3
	40대	100.0	14	42.9	57.1
	50대 이상	100.0	127	32.3	67.7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4	33.3	66.7
	비례대표	100.0	33	30.3	69.7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0	100.0
	전문학사	100.0	4	75.0	25.0
	학사	100.0	53	32.1	67.9
	석사	100.0	44	36.4	63.6
	박사	100.0	44	27.3	72.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26.8	73.2
	국민의힘	100.0	55	43.6	56.4
	정의당	100.0	5	40.0	6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0	100.0
여야별	여당	100.0	55	43.6	56.4
	야당/무소속	100.0	92	26.1	73.9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32.6	67.4
	재선	100.0	32	21.9	78.1
	3선	100.0	12	41.7	58.3
	4선 이상	100.0	14	50.0	50.0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좌진들의 의견은 의원들과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분포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58.3%의 응답자들이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장기적으로도 67.8%가 이민 확대를 선택해

서 의원들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별 정책선호의 분포는 의원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 요인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로 나타났다. 10년 이내에 필요한 대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55.2%가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60.9%의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이 이민 확대를 선호하였다. 의원들의 선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민 확대를 선호하고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는데, 보좌진의 경우에는 비율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민확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민정책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20대의 경우 54.9%가 이민 억제를 선호하였고, 30대는 38.5%, 40대는 32.7%, 50대 이상은 15.4%로 이민억제에 대한 선호가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50년을 고려한 장기적 대책을 살펴보면 연령대별 차이가 사라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보좌진의 정책선호의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나 65% 전후의 비율로 이민 확대를 선호하고 있었다.

〈표 8-3〉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
전체		100.0	240	41.7	58.3
성별	남자	100.0	132	41.7	58.3
	여자	100.0	108	41.7	58.3
연령별	20대	100.0	82	54.9	45.1
	30대	100.0	96	38.5	61.5
	40대	100.0	49	32.7	67.3
	50대 이상	100.0	13	15.4	84.6
직책별	보좌관	100.0	27	25.9	74.1
	선임비서관	100.0	40	25.0	75.0
	비서관	100.0	129	46.5	53.5
	인턴	100.0	42	54.8	45.2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사례수	%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4	44.8	55.2
	국민의힘	100.0	92	39.1	60.9
	정의당	100.0	7	14.3	85.7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40.0	6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57.7	42.3
	6개월~1년	100.0	29	65.5	34.5
	1년~4년	100.0	97	40.2	59.8
	4년 이상	100.0	87	31.0	69.0

〈표 8-4〉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사례수	%	%
전체		100.0	233	32.2	67.8
성별	남자	100.0	129	33.3	66.7
	여자	100.0	104	30.8	69.2
연령별	20대	100.0	80	32.5	67.5
	30대	100.0	93	31.2	68.8
	40대	100.0	47	36.2	63.8
	50대 이상	100.0	13	23.1	76.9
직책별	보좌관	100.0	27	25.9	74.1
	선임비서관	100.0	38	28.9	71.1
	비서관	100.0	126	34.1	65.9
	인턴	100.0	40	35.0	65.0

		합계		①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민은 가능한 억제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확대
		%	사례수	%	%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8	37.5	62.5
	전문학사	100.0	6	50.0	50.0
	학사	100.0	159	31.4	68.6
	석사	100.0	53	32.1	67.9
	박사	100.0	6	16.7	83.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29	31.0	69.0
	국민의힘	100.0	90	35.6	64.4
	정의당	100.0	7	42.9	57.1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5	.0	100.0
여야별	여당	100.0	90	35.6	64.4
	야당/무소속	100.0	143	30.1	69.9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32.0	68.0
	6개월~1년	100.0	28	35.7	64.3
	1년~4년	100.0	95	28.4	71.6
	4년 이상	100.0	84	35.7	64.3

다.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정책선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시급한 미래의제로 꼽은 세 가지 정책이슈 중에서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한 양극화 해소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의원과 보좌진의 정책선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당에서 주요 의제로 선택한 나머지 하나의 미래의제들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꼽은 주요 미래의제인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표 9-1〉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과감하게 확대	②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 및 점진적 에너지 전환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43.8	56.2
성별	남자	100.0	121	40.5	59.5
	여자	100.0	32	56.3	43.8
연령별	30대	100.0	6	50.0	50.0
	40대	100.0	16	56.3	43.8
	50대 이상	100.0	131	42.0	58.0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45.0	55.0
	비례대표	100.0	33	39.4	60.6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54.0	46.0
	국민의힘	100.0	56	25.0	75.0
	정의당	100.0	5	60.0	4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66.7	33.3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43.3	56.7
	재선	100.0	34	47.1	52.9
	3선	100.0	15	46.7	53.3
	4선 이상	100.0	14	35.7	64.3

〈표 9-2〉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과감하게 확대	②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 및 점진적 에너지 전환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59.9	40.1
성별	남자	100.0	115	57.4	42.6
	여자	100.0	32	68.8	31.3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40대	100.0	14	35.7	64.3
	50대 이상	100.0	127	61.4	38.6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해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체적으로는 56.2%의 국회의원 응답자들이 10년 이내에 필요한 대안으로 자유로운 사용확대를 선택했고, 65.3%의 의원들이 2050년의 시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사용확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사용 확대를 선택하여 정당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8.6%, 국민의힘은 53.6%의 의원 응답자들이 10년 내의 대책으로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2050년을 염두에 둔 경우에도 각각 63.4%와 70.9%의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사용 확대를 선택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보좌진들의 응답의 분포도 의원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A-10,11> 참조).

<표 10-1>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 확대	②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 고려 사회적 관리·통제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56.2	43.8
성별	남자	100.0	121	58.7	41.3
	여자	100.0	32	46.9	53.1
연령별	30대	100.0	6	33.3	66.7
	40대	100.0	16	56.3	43.8
	50대 이상	100.0	131	57.3	42.7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60.8	39.2
	비례대표	100.0	33	39.4	60.6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58.6	41.4
	국민의힘	100.0	56	53.6	46.4
	정의당	100.0	5	60.0	4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66.7	33.3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56.7	43.3
	재선	100.0	34	64.7	35.3
	3선	100.0	15	46.7	53.3
	4선 이상	100.0	14	42.9	57.1

〈표 10-2〉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 확대	②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 고려 사회적 관리·통제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65.3	34.7
성별	남자	100.0	115	67.0	33.0
	여자	100.0	32	59.4	40.6
연령별	30대	100.0	6	50.0	50.0
	40대	100.0	14	50.0	50.0
	50대 이상	100.0	127	67.7	32.3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4	69.3	30.7
	비례대표	100.0	33	51.5	48.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63.4	36.6
	국민의힘	100.0	55	70.9	29.1
	정의당	100.0	5	40.0	6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3	66.7	33.3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60.7	39.3
	재선	100.0	32	75.0	25.0
	3선	100.0	12	75.0	25.0
	4선 이상	100.0	14	64.3	35.7

데이터 활용에 이어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바이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명윤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바이오 기술은 미래의 먹거리이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바이오 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표 11-1〉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국회의원)

		합계		① 활용도가 높으므로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②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52.9	47.1
성별	남자	100.0	121	57.0	43.0
	여자	100.0	32	37.5	62.5
연령별	30대	100.0	6	50.0	50.0
	40대	100.0	16	62.5	37.5
	50대 이상	100.0	131	51.9	48.1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59.2	40.8
	비례대표	100.0	33	30.3	69.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48.3	51.7
	국민의힘	100.0	56	66.1	33.9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33.3	66.7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47.8	52.2
	재선	100.0	34	64.7	35.3
	3선	100.0	15	53.3	46.7
	4선 이상	100.0	14	57.1	42.9

〈표 11-2〉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국회의원)

		합계		① 활용도가 높으므로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②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49.0	51.0
성별	남자	100.0	115	51.3	48.7
	여자	100.0	32	40.6	59.4
연령별	30대	100.0	6	16.7	83.3
	40대	100.0	14	50.0	50.0
	50대 이상	100.0	127	50.4	49.6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14	52.6	47.4
	비례대표	100.0	33	36.4	63.6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48.8	51.2
	국민의힘	100.0	55	52.7	47.3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3	33.3	66.7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89	47.2	52.8
	재선	100.0	32	40.6	59.4
	3선	100.0	12	58.3	41.7
	4선 이상	100.0	14	71.4	28.6

제3장

결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꼽은 시급한 미래의제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양대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다뤄야 할 미래의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위 두 가지 미래의제에 더해 각각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원내 주요 정당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대별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들의 경우 양대 정당이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정책과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양당의 정책 선호의 차이가 커서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이슈는 당파적인 선호의 대립이 강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이 결부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도 크다. 노동 양극화 해소 대책에 있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다소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내의 단기 미래를 겨냥한 정책으로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편 복지를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별복지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2050년을 염두에 둔 장기 미래로 시점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과반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늘어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원의 다수의 선호가 장기적으로 보편복지로 가야한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의제의 특성상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어떤 정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는가,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책도 복지정책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단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는 고용규제 완화로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대 정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2050년을 대비하는 장기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정책에 비해서는 양당의 타협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대응하는 정책은 양대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다. 단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의 속도와 범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동하면 국민의힘은 인공지능의 노동대체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므로 규제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선 단기미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며 장기미래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자산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양대 정당의 타협이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기 미래와 장기 미래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기용 부동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지하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대선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의 국내 이민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국민의힘은 이민은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민 확대론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서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은 양당이 단기대책에서는 대립하나 장기대책으로 가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기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환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 활용을 효율화하고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견해가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장기 미래로 관점을 넓히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의제만큼 증장기적 관점을 공유

한다는 전제에서 상대 정당과 소통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는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주요 미래의제이다. 빅데이터 활용방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규제보다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견으로 향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에는 특정 입장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규제론과 지원론으로 양분되어 있는 양상이다. 양당 모두 내부적으로 규제론자들과 지원론자들이 비슷한 비율이므로 공론을 모으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미래의제 우선순위와 주요 분야 정책 선호를 조사해 본 결과 생산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영역이 있는 반면,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의제도 존재한다. 현대 사회의 공공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많으며, 전문성이 중요해 질수록 전문성을 축적한 행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주요 공공정책 의제들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혜집단과 비용부담 집단이 바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갈등적인 중장기 의제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과 국회, 특히 대통령과 원내 야당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에 대한 우리의 분석결과가 정당간의 토론을 활성화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표 A-1〉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1	55.6	44.4
성별	남자	100.0	133	58.6	41.4
	여자	100.0	108	51.9	48.1
연령별	20대	100.0	81	63.0	37.0
	30대	100.0	98	52.0	48.0
	40대	100.0	49	55.1	44.9
	50대 이상	100.0	13	38.5	61.5
직책별	보좌관	100.0	28	32.1	67.9
	선임비서관	100.0	41	58.5	41.5
	비서관	100.0	129	57.4	42.6
	인턴	100.0	41	65.9	34.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5	37.0	63.0
	국민의힘	100.0	92	85.9	14.1
	정의당	100.0	7	14.3	85.7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68.0	32.0
	6개월~1년	100.0	29	58.6	41.4
	1년~4년	100.0	98	54.1	45.9
	4년 이상	100.0	88	53.4	46.6

〈표 A-2〉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수		
전체		100.0	234	41.9	58.1
성별	남자	100.0	130	43.8	56.2
	여자	100.0	104	39.4	60.6
연령별	20대	100.0	80	41.3	58.8
	30대	100.0	94	47.9	52.1
	40대	100.0	47	34.0	66.0
	50대 이상	100.0	13	30.8	69.2
직책별	보좌관	100.0	27	22.2	77.8
	선임비서관	100.0	39	48.7	51.3
	비서관	100.0	126	45.2	54.8
	인턴	100.0	40	37.5	62.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0	30.8	69.2
	국민의힘	100.0	90	60.0	40.0
	정의당	100.0	7	28.6	71.4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5	40.0	60.0
여야별	여당	100.0	90	60.0	40.0
	야당/무소속	100.0	144	30.6	69.4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4	41.7	58.3
	6개월~1년	100.0	29	41.4	58.6
	1년~4년	100.0	96	45.8	54.2
	4년 이상	100.0	84	38.1	61.9

〈표 A-3〉 근로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한다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0	64.6	35.4
성별	남자	100.0	133	60.2	39.8
	여자	100.0	107	70.1	29.9
연령별	20대	100.0	80	68.8	31.3
	30대	100.0	98	58.2	41.8
	40대	100.0	49	65.3	34.7
	50대 이상	100.0	13	84.6	15.4
직책별	보좌관	100.0	28	67.9	32.1
	선임비서관	100.0	41	68.3	31.7
	비서관	100.0	128	63.3	36.7
	인턴	100.0	41	63.4	36.6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4	84.3	15.7
	국민의힘	100.0	92	31.5	68.5
	정의당	100.0	7	10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80.0	2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60.0	40.0
	6개월~1년	100.0	29	75.9	24.1
	1년~4년	100.0	97	63.9	36.1
	4년 이상	100.0	88	63.6	36.4

〈표 A-4〉 근로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한다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33	56.2	43.8
성별	남자	100.0	130	53.8	46.2
	여자	100.0	103	59.2	40.8
연령별	20대	100.0	79	60.8	39.2
	30대	100.0	94	52.1	47.9
	40대	100.0	47	55.3	44.7
	50대 이상	100.0	13	61.5	38.5
직책별	보좌관	100.0	27	55.6	44.4
	선임비서관	100.0	39	61.5	38.5
	비서관	100.0	125	55.2	44.8
	인턴	100.0	40	55.0	45.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29	66.7	33.3
	국민의힘	100.0	90	37.8	62.2
	정의당	100.0	7	71.4	28.6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5	100.0	.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4	58.3	41.7
	6개월~1년	100.0	29	51.7	48.3
	1년~4년	100.0	95	57.9	42.1
	4년 이상	100.0	84	56.0	44.0

〈표 A-5〉 인공지능 노동대체 대응방안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조절·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1	42.7	57.3
성별	남자	100.0	133	46.6	53.4
	여자	100.0	108	38.0	62.0
연령별	20대	100.0	81	49.4	50.6
	30대	100.0	98	39.8	60.2
	40대	100.0	49	38.8	61.2
	50대 이상	100.0	13	38.5	61.5
직책별	보좌관	100.0	28	25.0	75.0
	선임비서관	100.0	41	43.9	56.1
	비서관	100.0	129	45.7	54.3
	인턴	100.0	41	46.3	53.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5	41.5	58.5
	국민의힘	100.0	92	44.6	55.4
	정의당	100.0	7	28.6	71.4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40.0	6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48.0	52.0
	6개월~1년	100.0	29	55.2	44.8
	1년~4년	100.0	98	41.8	58.2
	4년 이상	100.0	88	38.6	61.4

〈표 A-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및 투기용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줄인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하여 자가 보유비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장려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1	62.7	37.3
성별	남자	100.0	133	60.2	39.8
	여자	100.0	108	65.7	34.3
연령별	20대	100.0	81	66.7	33.3
	30대	100.0	98	60.2	39.8
	40대	100.0	49	55.1	44.9
	50대 이상	100.0	13	84.6	15.4
직책별	보좌관	100.0	28	64.3	35.7
	선임비서관	100.0	41	56.1	43.9
	비서관	100.0	129	63.6	36.4
	인턴	100.0	41	65.9	34.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5	76.3	23.7
	국민의힘	100.0	92	39.1	60.9
	정의당	100.0	7	10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52.0	48.0
	6개월~1년	100.0	29	65.5	34.5
	1년~4년	100.0	98	66.3	33.7
	4년 이상	100.0	88	60.2	39.8

〈표 A-7〉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및 투기용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줄인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하여 자가 보유비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장려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34	50.9	49.1
성별	남자	100.0	130	52.3	47.7
	여자	100.0	104	49.0	51.0
연령별	20대	100.0	80	57.5	42.5
	30대	100.0	94	47.9	52.1
	40대	100.0	47	44.7	55.3
	50대 이상	100.0	13	53.8	46.2
직책별	보좌관	100.0	27	48.1	51.9
	선임비서관	100.0	39	35.9	64.1
	비서관	100.0	126	51.6	48.4
	인턴	100.0	40	65.0	35.0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8	75.0	25.0
	전문학사	100.0	6	16.7	83.3
	학사	100.0	160	52.5	47.5
	석사	100.0	53	47.2	52.8
	박사	100.0	6	50.0	50.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0	61.5	38.5
	국민의힘	100.0	90	33.3	66.7
	정의당	100.0	7	71.4	28.6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40.0	6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4	75.0	25.0
	6개월~1년	100.0	29	62.1	37.9
	1년~4년	100.0	96	43.8	56.3
	4년 이상	100.0	84	47.6	52.4

〈표 A-8〉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전기로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사용비율을 과감하게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	사례수		
전체		100.0	241	45.6	54.4
성별	남자	100.0	134	43.3	56.7
	여자	100.0	107	48.6	51.4
연령별	20대	100.0	81	46.9	53.1
	30대	100.0	98	48.0	52.0
	40대	100.0	49	34.7	65.3
	50대 이상	100.0	13	61.5	38.5
직책별	보좌관	100.0	28	46.4	53.6
	선임비서관	100.0	41	46.3	53.7
	비서관	100.0	128	46.1	53.9
	인턴	100.0	42	40.5	59.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6	57.4	42.6
	국민의힘	100.0	91	24.2	75.8
	정의당	100.0	7	71.4	28.6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38.5	61.5
	6개월~1년	100.0	29	44.8	55.2
	1년~4년	100.0	97	46.4	53.6
	4년 이상	100.0	88	46.6	53.4

〈표 A-9〉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전기로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비용을 과감하게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35	60.9	39.1
성별	남자	100.0	130	62.3	37.7
	여자	100.0	105	59.0	41.0
연령별	20대	100.0	81	69.1	30.9
	30대	100.0	94	55.3	44.7
	40대	100.0	47	55.3	44.7
	50대 이상	100.0	13	69.2	30.8
직책별	보좌관	100.0	27	66.7	33.3
	선임비서관	100.0	39	64.1	35.9
	비서관	100.0	127	52.0	48.0
	인턴	100.0	40	80.0	20.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0	70.0	30.0
	국민의힘	100.0	91	48.4	51.6
	정의당	100.0	7	57.1	42.9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40.0	6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92.0	8.0
	6개월~1년	100.0	28	60.7	39.3
	1년~4년	100.0	97	54.6	45.4
	4년 이상	100.0	84	58.3	41.7

〈표 A-10〉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2	55.8	44.2
성별	남자	100.0	134	58.2	41.8
	여자	100.0	108	52.8	47.2
연령별	20대	100.0	82	58.5	41.5
	30대	100.0	98	49.0	51.0
	40대	100.0	49	67.3	32.7
	50대 이상	100.0	13	46.2	53.8
직책별	보좌관	100.0	28	50.0	50.0
	선임비서관	100.0	41	58.5	41.5
	비서관	100.0	129	54.3	45.7
	인턴	100.0	42	61.9	38.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6	50.7	49.3
	국민의힘	100.0	92	63.0	37.0
	정의당	100.0	7	71.4	28.6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61.5	38.5
	6개월~1년	100.0	29	51.7	48.3
	1년~4년	100.0	98	58.2	41.8
	4년 이상	100.0	88	52.3	47.7

〈표 A-11〉 빅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36	64.0	36.0
성별	남자	100.0	131	65.6	34.4
	여자	100.0	105	61.9	38.1
연령별	20대	100.0	80	52.5	47.5
	30대	100.0	95	70.5	29.5
	40대	100.0	48	66.7	33.3
	50대 이상	100.0	13	76.9	23.1
직책별	보좌관	100.0	27	70.4	29.6
	선임비서관	100.0	39	71.8	28.2
	비서관	100.0	127	63.8	36.2
	인턴	100.0	41	53.7	46.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1	60.3	39.7
	국민의힘	100.0	91	70.3	29.7
	정의당	100.0	7	42.9	57.1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80.0	2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46.2	53.8
	6개월~1년	100.0	28	71.4	28.6
	1년~4년	100.0	97	62.9	37.1
	4년 이상	100.0	84	69.0	31.0

〈표 A-12〉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보좌진)

		합계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활용도가 높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41	55.2	44.8
성별	남자	100.0	134	55.2	44.8
	여자	100.0	107	55.1	44.9
연령별	20대	100.0	81	63.0	37.0
	30대	100.0	98	54.1	45.9
	40대	100.0	49	51.0	49.0
	50대 이상	100.0	13	30.8	69.2
직책별	보좌관	100.0	28	46.4	53.6
	선임비서관	100.0	41	46.3	53.7
	비서관	100.0	128	55.5	44.5
	인턴	100.0	42	69.0	31.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6	52.9	47.1
	국민의힘	100.0	91	61.5	38.5
	정의당	100.0	7	28.6	71.4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40.0	6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6	65.4	34.6
	6개월~1년	100.0	29	72.4	27.6
	1년~4년	100.0	97	54.6	45.4
	4년 이상	100.0	88	47.7	52.3

〈표 A-13〉 바이오 기술 규제에 대한 응답(2050년, 보좌진)

		합계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활용도가 높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	사례수	%	%
전체		100.0	236	50.0	50.0
성별	남자	100.0	131	51.9	48.1
	여자	100.0	105	47.6	52.4
연령별	20대	100.0	80	51.3	48.8
	30대	100.0	95	52.6	47.4
	40대	100.0	48	41.7	58.3
	50대 이상	100.0	13	53.8	46.2
직책별	보좌관	100.0	27	44.4	55.6
	선임비서관	100.0	39	46.2	53.8
	비서관	100.0	128	50.0	50.0
	인턴	100.0	40	57.5	42.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0	49.2	50.8
	국민의힘	100.0	92	52.2	47.8
	정의당	100.0	7	28.6	71.4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5	60.0	40.0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52.0	48.0
	6개월~1년	100.0	28	67.9	32.1
	1년~4년	100.0	98	48.0	52.0
	4년 이상	100.0	84	46.4	53.6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강우창, 구본상, 이재목, 정진웅. (2020)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26(3), 37-83.
-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18(2),5-38.
- 박윤희, 김민수, 박원호, 강신구, 구본상.(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22(3),117-158.
- 박현석 (2021).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정책과 국회. 국가미래전략 Insight 28호. 국회미래연구원.
- 서현진 (2016). 국회 갈등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분쟁해결연구,14(2),159-184.
- 유성진 (2009).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의정연구 15(1): 119-143.
- 조진만, 임성학.(2008).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정치정보연구,11(2),213-237.

Abstract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and policy preferences: A survey of Legislato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Our study endeavors to explore potential avenues for cross-party collabor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by examining policy preferences among legislators from different parties, identifying both area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Our survey results reveal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legislators from the two major parties share concerns over the pressing issues of rising inequ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Howev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exhibit sharp partisan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es to tackling these challenges. While both parties recognize the need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ddress demographic change and an aging societ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ns towards supporting the expansion of immigration as a solution to population decline, while opinions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are divided. Furthermor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ioritizes the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change as critical policy areas, whereas the People Power Party views deregulation as a means to advance science and technology.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 **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2451-1-3 (9534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